

“혁신도시 분양가 내려도 세종시 8배”

민주당 양승조의원 주장 “분양가 14% 인하안은 이미 확정된 재탕정책”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방침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발표한 ‘재탕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분양가 14% 인하는 혁신도시 사업 시행 초기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세종시 역차별에 반발하는 혁신도시에 분양가 14%를 깎아 주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혁신도시는 14%, 산업단지지는 최대 20%까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방안이 재탕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지역사업보완방안을 통해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와 공원면적 조성 등을 통해 가져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현행보다 38% 확대해 분양가를 14% 인하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골프장 부지(81만9천999㎡)에서 단독주택용지(9만8천739㎡)를 자족용지로 바꿔 원형지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양 의원은 이와관련,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제출한 ‘전국 혁신도시 지역별 평균 분양가’에 따르면 광주·전남 혁신도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143만9천원, 울산 297만3천원, 대구 284만5천원 등으로 이같은 분양가격은 자족기능을 제공을 위해 사업 시행 초기 대비 14.3% 인하된 가격이라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즉 정부가 이미 14% 정도 인하할 것을 염두에 두고 분양가를 작성해놓은 뒤 이를 마치 별도로 14% 인하해 주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만약 혁신도시 분양가가 14% 인하되더라도 세종시의 8배가 넘는 가격”이라며 “전국 혁신도시 분양가를 14% 인하하면 전국적으로 2조4천억원의 수입이 감소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면 역차별은 해소할 수 있지만 세종시는 기업에 주는 혜택이 사라져 유령도시가 된다”면서 “결국 문제 해결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립한 세종시 보완 추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행사 관계자들도 혁신도시 분양가 14% 인하는 지난해에도 여러차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의 세종시 수정 입법 추진으로 이전 공공기관들의 눈치보기가 극심해져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정상적인 건설에 비상이 걸렸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진척 상황

15곳 중 5곳만 부지 매입...택지분양은 '0'

지난 2007년 착공한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중대기호에 놓였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이전 기관들의 눈치보기가 극심해져 계약 등에 뚜렷한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25일 현재 부지매입 계약을 한 기관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한전 등 5곳에 그치고,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혁신도시내 택지 분양도 전무한 상황이다.

◇15개 기관 중 5개만 계약=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731만5천㎡)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은 여수시로 개별 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를 제외한 15개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전력·한국전력거래소·한전KPS 등 4곳, 정보통신 분야로는 한전KDN·우정사업정보센터·전파연구·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곳,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농업연수원·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곳,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한국컨텐츠진흥원 등이다.

이 가운데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곳은 한국전력(2009년 12월 30일 부지매입 계약)을 비롯, 전력거래소(2009년 12월 30일 계약)·한전KPS(2009년 12월 31일 계약)·사학연금관리공단(2009년 12월 28일 계약)·농수산물유통공사

(2009년 7월 31일 계약) 등 5곳에 불과하다.

2012년 입주를 위한 청사 설계를 발주한 곳은 한국전력(2009년 10월 5일)·전파연구(2009년 9월 22일)·우정사업정보센터(2009년 11월 5일) 등 3곳이 전부다.

이외 나머지 기관들은 여지껏 부지 매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전KDN의 경우 지난해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여지껏 부지 매입을 미루고 있어 ‘전형적인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으로 정부 부처 이전이 무산되면서 공공기관의 이전 눈치보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외 전파진흥원·전파연구·우정사업정보센터·농업연수원 등은 부지매입 예산의 올해 초 10%만 확보한 게 고작이다.

◇공공기관 이전 지연, 조성 사업 차질=당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7년 일제히 착공된 혁신도시는 이전 기관들의 토지 매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혁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 공공기업들의 경우 재정부담으로 허리가 휘 정도이다. 이미 수천억 원대의 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빌리거나 사채를 발행했지만 땅이 팔리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토지 매매계약이 늦어지면서 주택과 상가 건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지난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분양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7필지 36만3천490㎡)의 경우 한 곳도 팔리지 않았다. 대금 납부 조건을 3년 무이자 분할 납부로 완화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외 전남개발공사나 광주도시공사 등도 이전 기관들의 부지 매입이 완료돼야 공동주택이나 상업 용지 등을 분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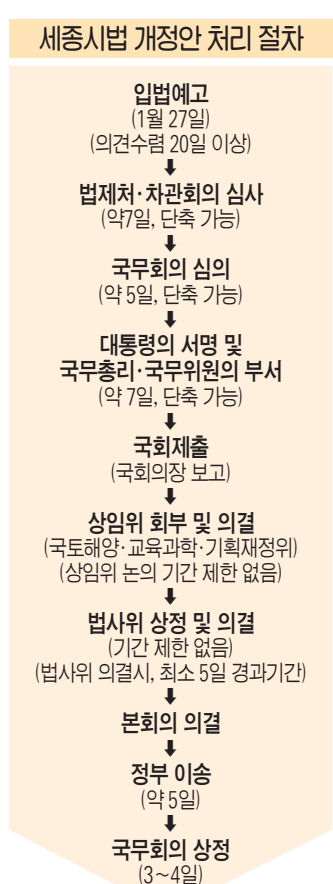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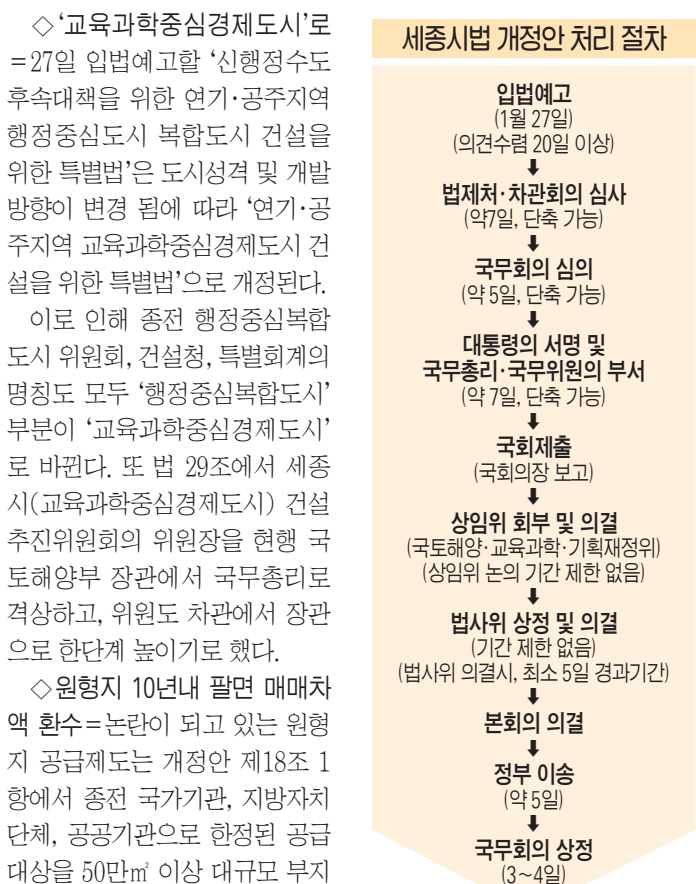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731만5천148.8㎡(221만 평) 면적에 1조4천841억원을 투입, 인구 5만 명(2만가구)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곳에는 여수시로 개별 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를 제외한 한전 등 15개 공공기관이 오는 2012년 12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나주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9개 공구)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각각 3곳씩 나눠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의 전체 공정률은 25.35%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은 구간은 28.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개발공사 9%, 광주도시공사의 평균공정률은 17.36%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종시 특별법 주요내용

오는 27일 입법예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 성격 변경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민간 투자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또 원형지 공급에 대한 특혜논란을 막기 위해 원형지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원형지 부지의 일부를 주민편의시설 등의 용도로 공사후(준공검사후) 10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매매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 용도 변경때 환수 원주민 부지 환매권 불허



대한민국 장애인활동보조 1등 기관!!
노인요양보호

사단법인 북구장애인복지회 활동보조사업기관은
2007년 사회복지서비스우수사례대상
2008년 동질우수사례경연평가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2009년 수범사례집 으뜸기관으로 소개되어
안전광주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본회사업노원할기요양기관은
바깥에서 서비스를 가장 잘 보이는 곳이 기관으로
앞이 가는 방문인도 돌 아픈한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목욕탕건립 추진기관
사단법인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사직동 480-41 3층, 홈페이지: www.bga.or.kr

민정모집 (062)269-6380 | 본회사무 (062)269-6590